

국힘, 한동훈 심야 기습 제명…계파 갈등 최고조

당 계시판 사태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26일 최고위서 확정
한 “답 정해져, 재심 신청 안 해”…친한계 “당내 민주주의 사망”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심야 회의를 통해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계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전격 제명하면서 집권 여당의 내홍이 견습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치적 해법 모색 없이 터진 사생결단식 충돌에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1시 15분께 한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윤리위가 활동 개시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전 대표를 죽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는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안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날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강성 당원들의 반발 심리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을 노려 윤리위가 ‘디네이’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제명은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당현·당규상 징계 의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윤리위 구성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최고위 인적 구성 역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과 비주류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징계안에 반대할 인사가 미땅히 않은 상황이다.

지도부와 당권파는 이번 결정을 “과거와의 단절”로 규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며 “한 전 대표 징

계를 계기로 당이 윤 전 대통령 입당부터 이어진 여러 정치적 부작용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우 최고위원 또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반면 한 전 대표 측과 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효력정지 거쳐본 신청 등 법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송석준 의원은 “심각한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고, 권영진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통합을 해지는 한밤중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훈 의원도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최고위 부결을 촉구했다.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과 중진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자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는 윤리위 결정 재고를 요청했고, 최재형 전 의원은 “당원계시판 문제에 잘못이 있더라도 제명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측의 조건 없는 만남과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면 당내에서는 친한계의 집단행동이 있더라도 ‘2월 비대위 출범설’ 등 장 대표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하지만, 당내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의원들이 많아 장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원들과 회견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속도낸다

정청래 대표, 공청회 개최 특별 지시…“의견 수렴 후 수정·변경”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민주당이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 중이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제 청와대와 정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달라. 수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감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15일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전문가·진보 야당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다. 당내에서는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

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일원화 구조’로의 수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암이 아니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며 정부안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전날 서울공항에서 상호견제를 언급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리가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중수청 인력 구조 문제와 함께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도 넘기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도 이번 속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 설명회

20일 전남·23일 광주서 개최… 선거운동 방법·제한 사항 등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연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앞서 20일 오후 2시 전남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비롯해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